

‘전주비빔밥축제’ 국제교류 ‘물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쿠킹콘서트’ 통해 청두·카리사하시·호찌민 전통음식 소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전주 비빔밥축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의 국제교류 장이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 시내 일원에서 열린 올해 축제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중국 청두와 일본 카리사하시, 베트남 호찌민 지역의 유명 셰프가 초청됐다.

이들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쿠킹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 도시의 전통음식을 소개했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이국적인 음식들을 생생한 쇼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한 외국 셰프들에게는 음식 창작의 영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청두의 리우관강 셰프는 “청두는 사천요리의 대표적 도시인데 청두의 향신료에 전주의 식재료가 어색함 없이 어우러지는 것이 매우 놀랐다”며 “앞으로도 전주의 식재료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일본 카시하라시의 후지사와 나오토 셰프도 “전주비빔밥축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나의 요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영감과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음식과 문화의 교류는 물론 음식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비빔밥축제에 초청된 청두와 카시하라시의 셰프단은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과 학생 교류 및 인턴십에

협력기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여기에 국내 최대 조리사협회 중 하나인 (사)한국조리사중앙회와는 음식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비빔밥축제를 통해 4건의 국제교류 협약이 이뤄졌다.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10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은 등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차게 진행됐다”면서 “아시아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과의 국제교류 물꼬를 튼 것도 올해 비빔밥축제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아이숲에서 나무미끄럼틀 타고

전주시, ‘떼구르르 솔방울숲’에서 숲들이 행사 개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숲속에서 맘껏 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숲놀이터인 ‘전주아이숲’ 조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는 30일 천잠산 일대에 조성된 자연친화적인 숲놀이터인 전주아이숲 ‘떼구르르 솔방울숲’에서 지역 아동과 주민이 함께하는 숲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숲속에서 맘껏 놀아보는 자유놀이를 시작으로 솔방울에 새들의 겨울간식 달아주기, 숲모임터에 야생화 심어주기 등 새와 조성된 숲놀이터에 아이들이 함께 숲들이 선물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천잠산 일원에 조성된 ‘떼구르르 솔방울숲’은 최근 완공된 전주

시 4번째 숲놀이터로 소나무군락지를 중심으로 나무미끄럼틀, 숲속 오두막, 솔방울 농구대 등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창의적인 숲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아이들이 연못으로 직접 들어가 만져보며 관찰할 수 있는 소규모 생태연못이 조성돼 있다.

또한, 시는 최근 서곡지구에도 참나무가 우거진 숲 공간을 활용, 정글숲을 지나며 나무위의 집에 오르고 통나무 외다리로 계곡을 건너는 숲속 모험놀이터인 ‘꼬불꼬불 도토리숲’도 3번째 숲놀이터로 조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건지산 조경단 인근 ‘입금늪 숲’과 남고산 인근의 ‘떡갈밭래 숲’ 등 전주아이숲 2곳을 조성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대피지시 무시한 어선 선장 적발

기상악화로 인한 대피지시를 무시한 낚시어선 선장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58)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21명을 태우고 군산시 옥도면 황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던 중 해경이 내린 대피지시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배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이 기상악화로 조끼귀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무시해 해경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시간을 단축하면 받은 요금을 환불해줘야 해 이같이 무리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장애인복지시설 비리사건 엄벌 촉구 평화주민사랑방 문대성 대표와 공지영 작가 등은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와 김 전 신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집 일제 정비

완산서 서부파출소는 30일 관내 새연초등학교 앞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6개소를 방문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날 정비는 최근 아동들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집 문안 순찰을 하고 하얗길 통학로, 학원밀집지역 등 적정 배치 여부와 표지 문 부착상태 및 위치를 점검,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해태시 서부파출소장은 “관내 아동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고 계신 아동지킴이집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진행중

읍서넬캐피탈 장모 대표이사, “다스가 BBK에 먼저 돈 140억 받아가 피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다스(DAS)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0일 이 전 대통령 등을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읍서넬캐피탈 장모 대표이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

혔다.

지난 13일 장모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장씨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BBK 투자자문대표 김경준씨를 압박해 읍서넬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읍서넬캐피탈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 다스가 김씨로부터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다스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구체적 정황과 고발취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주시, 인후2동·전일중 합동 지역특성화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주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와 인후2동, 전일중학교는 30일 전일중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단위의 획일적인 민방공 상황위주의 주민대피훈련에서 탈피해 지역별 재난 및 안보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으로 진행됐다.

인후2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

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모두 모여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전일중학교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학생과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대피훈련과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훈련에서 전일중 학생과 주민들은 리히터규모 6.0의 지진 발생을 가정하고 지진상황전파와 동시에 임시 강당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김민근 기자

현장감식 출동 과학수사요원이 범인 체포

현장감식을 위해 출동한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다.

완산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A(61.남)씨를 체포하고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 15분께 전주시에 위치한 한 모텔 앞 주차 중 인 차량에서 가방을 훔쳐 인근 마트에서 훔친 카드로 결제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과학수사요원인 김경삼 경사는 현장감식을 위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누건 분석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려 했다는 문자가 와서 달미를 잡았다.

현장에 있던 김 경사는 해당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카드가 쓰인 마트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보를 통해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발생 3시간여가 지난 인근에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김 경사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절도 등 전과 10범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여죄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